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현실



이 영 호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지난 5월 지방대학의 총·학장들이 '한국지방대학 총·학장협의회'를 결성하고 가칭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여 국회의원 3분의 2를 넘어서는 196명의 날인을 받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재정을 대학경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교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발의였다. 이와 같은 대학 총·학장들의 발의는 지방대학의 재정적 현실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대학 사정과는 달리 지방대학의 사정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마저도 급감하고 있어서 그 실정이 거의 매일처럼 지방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에 부심한 나머지 지방 소재의 대학들에게 외지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호소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방인구의 절대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구이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인구의 감소란 삶의 하부구조의 취약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의 대부분 기업들이 지방대학 출신들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첨단 기업이나 산업체는 물론이고 굴뚝 산업체마저도 지방이전을 회피하며 오히려 떠나려 하는 것이 지방의 산업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애향 단체장들도 이 일로 백방을 뛰어다니며 노심초사하지만 허덕이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오죽하면 참여정부가 나서서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겠는가. 현대적 국가 수립 이후 줄곧 지방을 소외시켜 온 불균형으로 정체된 한국사회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으로 때늦은 바 있으나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 신속하게 회의와 설명회를 열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역혁신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NGO, 지방 언론, 연구소 등의 활발한 상호 협력과 공동 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연구개발, 생산과정, 행정체

도 개혁,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얼마 전 정부는 이에 부응하는 국가균형발전법을 선포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즉시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각 지방대학으로 하여금 이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에 걸맞은 산학협동을 통한 대학과 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의견이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할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은 이미 산업체나 기업체가 활발하게 존재하는 지역, 또는 국책 사업과 관련한 연구소나 프로젝트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일 것이며, 그 대학들이 주축이 된다면 많은 대학들은 동등한 참여의 길이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공사례로 열거한 미국이나 서구, 일본의 예들 역시 기존의 사회적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오직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사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활성화는 지역의 실질적인 현실들을 감안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똑같이 달리기에는 심각한 핸디캡을 짊어진 지방의 삶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목민적 배려로부터 국가 장래의 정책 시행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길일 것이다.

전국 357개의 2년제 이상의 대학은 나름대로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산업과 직업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학들도 인간교육이나 국가와 사회를 위한 지도력 양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대학사회를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인문사회계열의 상황은 지방대학의 경우 참으로 심각하다. 더욱이 대학체계의 대부분을 인문사회계열이 차지하는 대학들은 지방대학을 살려내고 지원하겠다는 지역혁신체제의 보호망에서마저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금번 정책의 골격이기도하다.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은 기초과학과 함께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기반인 지식체계를 마련하는 토양이다. 이러한 역사적 학문기초가 대학으로부터 도외시될 때 국가는 세계경쟁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 가지 덧붙이면, 대학 가운데 지역혁신체제에 동참할 길이 막힌 특수 목적의 대학들, 예를 들어 종교기관 및 사회 봉사자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들은 산업체나 기업과의 유대를 기대할 수 없다.

설립 목적에 따른 특수한 대학들이 일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시행을 위한 대학지원체제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정책은 대학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안목을 무시하고 있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균형 발전은 학문의 균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기업주의나 시장논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귀중한 대학의 또다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물질과 정신, 모두의 균형을 이루는 진정한 국민의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대학 총·학장들의 '지방대학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청에서 나타난 지방대학의 현실은 단순히 재정지원만을 말하지 않는다. 한 정책이 성공적인 열매를 얻으려면 진정으로 그 정책시행이 마이너리티의 편에서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